

#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

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 
직불예산 2조 4천억 원 확보

공요로운  
농업·농촌

국민과  
함께하는  
농업·농촌

사람·환경 중심의 농정,  
국민의 농업으로  
도약하겠습니다.

신뢰받는  
농업·농촌

## Q & A

①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언제 인가요?

A. 4~5월 경 신청·등록을 거쳐 준수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 부터 직불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.

② 내가 받는 직불금이 얼마나 오르나요?

A.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바탕으로, 향후 농업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

③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얼마인가요?

A. 80kg당 21만 4천 원(10kg당 2만 6,750원) 으로 결정되었으며, 과거 18만 8천 원에서 2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.

④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쌀 농가는 쌀값 하락 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?

A.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, 시장격리 및 생산조정을 결정하여 쌀값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### 공익직불제가 뭐야?

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 공동체 유지,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래.



### 공익직불제는 어떻게 개편 되는거지?



기존의 쌀·밭농업·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,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.

#### 개편전

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직불 등  
조건불리지역직불  
쌀소득보전직불  
밭농업직불

#### 개편후

선택형 공익직불  
기본형 공익직불  
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직불 등  
면적직불금 (역진적 단가)  
소농직불금 (정액)



공익직불제

###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면 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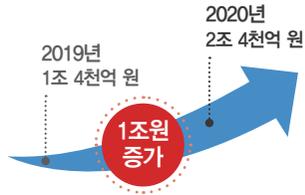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 | 044-201-1781  
농촌진흥청 | 063-238-1502  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054-429-4000  
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사무소



# 풍요로운 농업·농촌

소득안정 강화

공익직불제 개편으로  
직불 예산이 대폭  
증가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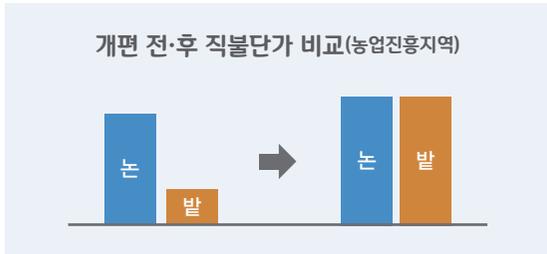


## ■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

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, 영농종사기간, 농촌거주기간,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

## ■ 논·밭,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

다만, ①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·밭,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,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



## 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

다만,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설정

국민과

# 함께하는 농업·농촌

공익기능 증진

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 
농업·농촌이 되도록 농업인의  
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


농업·농촌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.

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

모두가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.

영농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

책임있고 당당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.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등

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.

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등

우리의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겠습니다.

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



# 신뢰받는 농업·농촌

부정수급 방지

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 
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 
개선하겠습니다.



## ■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 강화

직불금 신청정보를 농자재·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 
증명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 강화

## 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

신규 취득농지, 관외경작자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  
실태 조사 강화

## ■ 거짓·부정한 신청·등록 시 제재 강화

(기존)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 ▶ (개선) 5배  
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

## ■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

